

한국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이념으로서의 과제

朴 鍾 喆*

◁ 目 次 ▷

I. 머리말

II. 민족주의의 개념

III.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IV. 통일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I. 머리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두가지의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는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기업들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과 함께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공동체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던 다민족국가는 단일민족 단위로 해체되는 진통을 겪음으로써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역사적 경향 속에서 18세기 이후 개별적 정치공동체 수준과 국제정치 수준에서 중요한 단위였던 민족국가의 장래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중세와 같이 분권화된 세계질서가 형성될지, 세계정부가 구성될지, 아니면 몇개의 지역공동체권역으로 세계가 구분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몇가지 경향들이 상호작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세계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국가는 대내적으로 개인의 삶을 규정짓고 대외적으로 개인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19세기말 서구로부터 밀려 온 근대화의 충격에 휩쓸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한민족에게 아직까지 민족주의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언”¹⁾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군사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민족에게 민족주의는 현재의 각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과 변영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단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 보고 통일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미래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의 개념 및 유형변수를 염두에 두고 해방이후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하

1)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서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참조.

고자 한다. 둘째,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한국사회의 갈등통합원리와 통일이념으로서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II.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국가 수만큼이나 다양한 개념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의 결합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통특성에 착안하여 민족주의를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는 민족 단위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역사상 존재하였던 여러 유형의 정치공동체중에서 민족국가는 민족의 단위와 정치공동체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치체제다. 민족주의를 발생하게 하는 민족의 공통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언어, 혈통, 종교, 문화, 역사의 공유 등 객관적 요인과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지적된다.²⁾

둘째, 민족주의는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공통성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정치공동체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구분된다.³⁾ 유럽에서 근대국가형성은 연방제나 제국, 종교적 연합체제, 무역공동체, 중세봉건질서로의 복

2) 차기벽, 「민족주의원론」(서울: 한길사, 1990), pp. 45-62.

3) 이용희는 문화적 동질집단인 「민족」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민족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민족적」인 것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집단적 정치의식인 「민족주의적」인 것을 구분하였다.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서울: 서문당, 1977), p. 68.

귀 등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중에서 이념적·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은 필연적이었 다기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우연한 사건들이 중층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근대국가는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과 상비군, 조세제도 등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국가와 國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국가, 그리고 식민지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⁴⁾

셋째, 민족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 의식이다. 민족주의는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화된 세계관과 혁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하며 대중동원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는 사유체계나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⁵⁾

한편, 민족주의는 근대이후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온 여러가지 요인들 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등장하였으며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민족주의이념은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각 나라별로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의 결합형태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민족주의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4) 근대국가의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성격에 대해서는 이용희, 「일반국제정치 학 上」 (서울: 박영사, 1980), pp. 100-241 참조.

5) Leon P. Baradat, *Their Origins and Impact* (N. J.: Prentice-Hall, Inc, 1984), pp. 7-10.

6) 콘(Hans Kohn)은 서구형 민족주의와 비서구형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스나이더 (Louis Snyder)는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tive nationalism), 분열적 민족주의(disruptive nationalism), 공격적 민족주의(aggressive nationalism), 현대민족주의(contemporary n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헤이스(C. Hayes)는 인도주의적 민족주의(humanitarian nationalism), 자코뱅 민족주의(jacobin nationalism), 전통적 민족주의(traditional nationalism),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l nationalism),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구분 하였다.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 (서울: 지식산업사, 1983), pp. 83-93; 김영작, 「「Nationalism」의 원리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위상,」 「국제정치 논총」, 제 23집 (1983), pp. 65-69.

유형론보다는 민족주의를 형성 변화시킨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 요인중에서 특히 세계체제, 국가-사회관계 및 계급관계, 산업화 등의 변수가 중요하다. 이중에서 외부 요인인 세계체제와 내부 요인인 국가-사회관계는 민족주의의 발생에 관련된 변수이다. 그리고 산업화유형은 민족주의의 정책방향에 관련된 변수이다.

첫째, 민족주의의 유형을 결정하는 외부요인은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다. 세계체제는 국제적 노동분업 구조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체제와 국가간 정치·군사관계로 이루어진 세계국가체제로 구분된다. 민족국가가 국제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주의가 세계경제체제 및 세계국가체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의 유형을 분류하는 내부 요인은 국가-사회관계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집단을 단위로 하지만 실제로 「민족」은 다양한 하위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세력이 어떤 이유로 민족주의이념을 표방하고 민족주의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각 나라의 국가-사회간 역학관계, 계급관계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이 달라진다.

셋째, 민족주의의 유형은 산업화정책에 의해서 달라진다. 세계경제체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라는 자유무역주의 측면과 함께 일단 국경선에서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 통제되는 보호무역주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간의 긴장관계에 대한 일정한 적응양식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화의 시점, 국가와 국내자본 및 해외자본과의 관계, 산업화주도세력, 산업화정책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Ⅲ.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남북분단후 한국민족주의는 운동의 실체로서의 활력을 상실하고 논의 자

체가 금기시되거나 민주화, 경제발전, 통일 등 다른 문제와의 관련속에서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이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일제 식민지배의 경험과 남북분단은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충격에 대한 한국민족주의의 실패였다. 근대국가 건설과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여러 종류의 운동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된 경험과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민족주의를 내면으로 침잠케 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남북분단 현실은 한편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현실속에 안주하는 체념을 낳기도 하였다.

둘째, 유럽이나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와 달리 한민족은 민족적 동질성과 단일국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근대적 민족주의의 형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⁷⁾ 단일민족의 공통성을 당연시함으로써 근대적 가치관과 규범에 근거한 민족주의의 근대적 성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민족주의의가 대외적으로 저항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대내적 갈등통합 원리로서의 측면이 약한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해방후 한국의 국가는 식민지시대에 과대성장된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위로부터 형성되었다.⁸⁾ 지배세력은 민족주의 이념에 의존하거나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세계적 냉전과 분단구조에 편승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7) 이와 관련하여 노재봉은 한국에서는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요인때문에 낭만적 민족주의가 존재하며 그 때문에 한국민족주의가 활력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서울: 아세아 정책연구원, 1977), pp. 229-234; 손세일도 한국민족주의의 단일민족주의적 성격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하기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서울: 민음사, 1983), p. 132.

8)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서울: 한길사, 1985), pp. 183-216.

따라서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한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이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이 표출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넷째,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국가주도하에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가 추진됨으로써 경제적 민족주의가 전면에 내세워질 수 없었다. 국가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본 및 기술의 합리적 배분과 시장조건에의 순응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통치의 경험과 분단현실, 단일문화전통, 위로부터의 국가건설과정, 중상주의적 산업화 등이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활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해방이후 한국정치외교의 흐름 속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도 민족주의를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⁹⁾

본 논문에서는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이 민족주의의 대내외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의 정책과 정책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한 저항세력들의 입장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조명한 것이다.

해방후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정치이념과 정책프로그램간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두가지 유형의 민족주의를 첫째 외부요인인 냉전체제와 분단, 둘째 내부요인인 국가—사회관계, 셋째 산업화정책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9) 진덕규는 한국에서 현대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일민민족주의(1945-1950년대), 계몽적 민족주의(1960년대 초), 교도적 민족주의(1962-1967년), 산업화민족주의(1967-1972년), 국가민족주의(1970년대 후반), 민족주의 대립(1980년대 이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공식화되지 않고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국가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의 대립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권 2호 (1991) 참조.

1.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가. 외부요인 : 냉전체제와 분단

해방후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일차적 요인은 국제적 냉전체제다. 2차대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군사적인 것이었다.¹⁰⁾ 한국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세계적 대결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침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해게모니하에서 군사적 안보가 보장됨으로써 한국의 집권층은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에 힘쓰거나 민족주의 이념에 호소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후원·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방후 분단상황과 좌·우이념 대립은 민족주의의 활동공간을 극도로 제약하였다. 더욱이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극단적 이념대립과 체제대결로 몰아갔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이념대결을 넘어설 수 있는 민족주의의 포용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는 정치적 경쟁구조의 제도화를 제약하였다.¹¹⁾ 남북 대치상황과 북한의 빈번한 도발 등으로 인하여 민족주의적 상징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반대세력은 「용공주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경쟁의 이데올로기지형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쟁은 보수세력간의 권력투쟁으로 한정되었으며 각종 연줄망을 동원하려는 과벌대립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10) 임현진, 권태환, “국가와 국제정치 경제체제: 한국에서의 종속적 발전의 경험,” 「한국사회학연구」, 7 (서울: 한울, 1984), p. 69.

11) 안병준은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가 동일시되었으며, 안보는 북으로부터의 안보유지와 국내급진세력의 도전으로부터의 체제유지라는 대내적 안보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안병준, “한국에 있어서 국가, 사회 및 정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6), pp. 333-334.

나. 내부요인 :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민족주의가 대외적 측면과 함께 대내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민족주의의 경우 19세기말 이후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측면인 저항민족주의의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남북분단과 좌·우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의 대내적 측면이 구체화될 계기가 없었다.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국제냉전의 결과로 외부로부터 주입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우위에서 현상이 나타났다.¹²⁾ 한 정치학자의 표현처럼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념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는捨象된 채 그 外意(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마치 보편적 원리처럼 취급되었다”¹³⁾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사회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내재화시킬 헤게모니계급이 결여된 채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허약하였다.¹⁴⁾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과 동일시되었으며 국가가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움에 따라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¹⁵⁾ 그리고 미국이라는 후원국가가 국제적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결수단으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가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의 내면화보다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외면적 의미만이 강조

12)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pp. 221-222.

13) 박상섭,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 412.

14) 위의 논문, p. 413.

15) 임현진, 백운선,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 정치와 국가」, p. 230

되었다. 그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보수지배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비탄력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¹⁶⁾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는 중산층과 노동층, 수입대체산업가들로 구성된 민중연합이 형성되었다.¹⁷⁾ 그러나 한국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미원조물자의 배분 및 가공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료와 자유당, 수입대체산업가들은 중산층 및 노동자층과 연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더욱이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급진적 민족주의를 상실하고 체제순응적으로 되었으며, 지주들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의 보수연합세력은 수입대체산업에 반대하는 지주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적 민족주의연합을 형성할 필요도 없었다. 보수연합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표면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과 선거조작에 의해서 정치적 지배를 지속하고자 함에 따라 정치이념과 정치현실간의 괴리가 커졌다.

5.16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엘리트는 군사정권 초기에 「내포적 산업화 정책」¹⁸⁾을 내세우고 농어촌 고리채정리, 화폐개혁,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민중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였다.¹⁹⁾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민주공화당을

16) 박상섭, “한국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기능주의적 환원론의 극복을 위한 시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1987), pp. 471-472.

17)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와 민중주의연합에 대해서는 Albert O. Hirschman, “The Political Economy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in Albert O. Hirschman, *A Bias For H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 85-123 참조.

18) 군부의 집권초기 경제정책을 이념대결보다 국가이익우선, 기간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건설, 경제계획과 국가의 역할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포적 산업화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기미야 다다시,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Ho-Yeol Yoo, “A New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1961-1963: Crisis, Uncertainty, and Contradic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참조.

19) 김용호는 한국의 민주공화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을 헤게모닉정당 (hegemonic party)의 틀에서 비교하고 민주공화당은 경쟁적 정당정치의 경험, 정당내의 이질성,

조직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은 군부지도층 내부의 정책대립과 미국의 압력, 동원적 정당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 등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변질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거나 반제국주의적·반미적인 상징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²⁰⁾

1공화국의 보수지배세력이 외형적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던 것과 달리 3공화국 이후 집권층은 반공과 함께 경제발전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웠다. 반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이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반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적 민주주의」, 「생산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들이 제시되었다.

유신체제는 안보와 경제발전주의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통치체제였다.²¹⁾ 유신체제의 집권층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으며 대중동원을 위하여 민족주의이념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권위주의적 통제와 위로부터의 총력체제 구축²²⁾에 의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신체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민중주의 정책의 결여,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력 미약 등의 요인때문에 헤게모닉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호, “권위주의리더쉽과 패권정당운동 : 한국과 멕시코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1989), pp. 223-239.

20) Jae-Souk Sohn, “Political Dominance and Political Failur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Henry Bienen, ed., *The Military Interven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p. 115 ; Sung-Joo Hah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1961-1984,” in Robert A.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129.

21) 진덕규는 군부의 이념적 성향이 반공과 발전주의를 결합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체제연구서설,” 「한국사회변동연구 1」 (서울: 민중사, 1985), p. 48.

22) 김영명은 유신체제를 분단상황에서 총력체제 구축과정으로 이해하였음.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377-408.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냉전체제와 분단의 구조적 조건이 적절히 활용된 결과였으며 그 부산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수반되었다. 위로부터의 산업화는 물질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위로부터의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체제는 민주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산업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장시킴으로써 사회로부터 포위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대통령직선제 실시, 1992년의 문민정부의 탄생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 산업화정책 : 원조경제체제에서 중상주의적 산업화로

1950년대에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상업자본가와 관료, 정치인들은 군사원조로 제공된 미잉여농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쟁하였다.²³⁾ 1공화국의 자유당정권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반 또한 미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정당성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6후 군부정권 초기에 민족주의적 발전전략이 실패한 뒤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위로부터의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은 민족주의적 에너지를 동원하려던 초기 정책에서 벗어나서 신중상주의적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업정책이었다.

신중상주의는 서유럽의 경제적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중상주의가 2차대전 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재현된 것으로 수출주도와

23) 1공화국의 수입대체산업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박종철,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한국정치학회보』, 22집 1호 (1988), pp. 97-118.

보호무역주의, 공업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 先성장 後분배,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국력배양 등을 목표로 한다.²⁴⁾ 한국의 신중상주의 산업화전략은 지도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의 형태로 나타났다.²⁵⁾ 서구에서 자본가가 자본축적에 의해서 시민사회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가 자본가를 육성·보호하였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정책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한층 중요한 동기를 부여 받았다.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요인외에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²⁶⁾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형성자 역할」과 「시장순응자 역할」을 신축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한국의 국가는 재정·금융정책, 외환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조정을 통하여 시장의 작동구조와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형성자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시장형성 역할이 지나쳐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장순응자 역할」을 해야 했다.²⁷⁾

국가가 「시장형성자 역할」에 충실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거나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를 규제할 경우 국가이익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벌의 부정축재처리(1960년, 1961년)와 부실기

24) 박광주,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194-196; 애퍼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제발전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강제력보다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치체제를 신중상주의체제(neo-mercantilism)라고 정의하였다.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391-416.

25) 박광주, “한국적 지도자본주의론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 28 (1987 가을), pp. 57-83.

26)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산업화와 국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배호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법문사, 1992), pp. 178-203.

27) 임현진, 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 (91 겨울), pp. 122-130.

업정리(1969년)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개별 자본가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위한 산업조정이라는 민족주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5.16후 부정축재처리의 불완전성, 8.3조치(1972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과정(1979-1981년)에서 초국가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현실 등은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는 국제적 냉전구조와 남북분단구조 속에서 先성장 後분배, 先성장 後민주화, 先성장 後통일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에 정면 도전하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자원 동원과 권위주의적 방식을 결합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였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시민층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 국제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계층간·지역간 갈등 수반 등으로 인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 도전에 시달렸다.

2.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가. 외부요인에 대한 저항 : 종속에 대한 비판과 탈종속의 모색

해방후 국가건설과 산업화가 냉전체제와 분단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한국의 대외규정성, 특히 대미의존은 체제비판세력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미간 후원·수혜관계에 대한 비판은 상황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반미감정에서부터 집단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50년대 대미비판은 주로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오만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의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반미의식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는 3공화국의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역학관

계를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집권층은 정권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확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반일감정의 폭넓은 공감대 때문에 이 문제는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자세 및 협상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 이유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집권층과 일본의 기업가 및 한국의 기업가간에 유대망이 형성됨으로써 일본자본이 한국에 재상륙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분업체계가 형성되어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1980년 광주사태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미주의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5.16, 광주사태 등과 같이 한국의 중요한 정치변화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냉전체제 형성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에 있어서 미국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화보다는 정치안정과 군사적 안보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한국에서 권위주의정권의 등장과 지속을 묵인 내지 지원한다는 논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반미의식은 1982년 3월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계기로 반체제세력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이며 정치·군사적 후원·수혜관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와 종속의 구조적 관계」로 인식되었다. 1980년에 나타난 급진적 반미운동은 여러가지 갈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의 식민지적 종속성과 한국지배층의 매관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²⁸⁾ 요컨대 1980년대의 반미운동은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형성

28)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과시즘론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서 민족해방파(NL파)와 민중민주주의파

과 산업화의 배경이 되었던 한·미관계와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 중상주의적 산업화전략 등을 「구조적 종속」이라는 급진적 시각에서 비판하였다.²⁹⁾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탈종속의 대안으로 국제분업체제로부터의 탈퇴와 자립경제체제 (autarky)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바로알기운동과 주체사상의 수용이 시도되었다. 대외종속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 일으킬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한미관계를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관계로 규정하고 비현실적인 폐쇄체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편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논리적 설득력과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나. 내부요인에 대한 저항 :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민중민주주의로

1950년대에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주된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충실한 실천에 대한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민주주의이념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문제야말로 자유당정권이 직면한 최대 딜레마였다. 집권층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일시하고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판은 자유당정권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에서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해게모니하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보수세력들이 민주주의 對 독재라는 이분법을 중심으로 경쟁하였던 것이다.

3공화국에 들어서서 집권층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집권층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공화국 초기 반대세력의 주된 공격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5.16후 학생들의 「민족적

(PD파)로 구분되었다.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2」 (서울: 죽산, 1989)를 참조하기 바람.

29) 장달중, “반미운동과 한국정치,” 김덕중 외,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123-143.

민주주의의 장례식」은 민족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대외의존관계 형성과 독재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갈등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반대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점차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반체제운동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학생과 지식인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과 연계하는 양상을 띠었다.

1970년대말 이후 대외적 종속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반체제세력은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중 및 민중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³⁰⁾ 실천적 차원에서 민중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의 연합을 의미하였다. 민중민주주의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지배층의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민중연합혁명에 의해서 富 및 권력의 분배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적 종속관계로부터의 탈피와 계급지배의 철폐를 목표로 한 민중민주주의는 해방후 여러 갈래로 잠재화되어 있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가장 급진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편성을 획득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산업화로 인한 중산층의 형성, 남북분단의 현실 등으로 인하여 급진적 변혁운동의 활동공간은 극도로 협소하였으며 정치적 실체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30) 박현채는 민중을 노동자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 소상공업자,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서울: 한울, 1986), pp. 49-56; 한완상은 민중을 총체적으로 피지배층으로 정의하고, 對自의 民衆으로서의 중산층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완상, 「민중과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0), pp. 39, 79; 한상진은 중산층과 민중의 귀속의식을 동시에 지니는 「중민」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중산층과 민중의 개념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pp. 65-66.

다. 분단극복과 통일운동

분단상황에서 통일문제는 남북한 지역의 영토적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념대결 및 남북한 각각의 체제유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시각에서의 통일문제 제기는 국제냉전구조와 반공이념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으로 보수지배세력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일문제논의는 체제문제와 직결된 금기사항에 속했다. 1공화국에서 자유당정권의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던 진보당은 당수가 사형되고 당이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4.19후 학생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통일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장면정부는 유엔감시하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론을 제시한 반면, 진보세력들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군철수, 남북교류, 중립화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³¹⁾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4.19후 다양한 통일론의 전개는 분단극복과 민족주의의 과제를 확대된 정치적 공간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통일론의 제기는 보수세력과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공화국과 유신체제기간동안 반체제세력의 비판은 주로 한일국교정상화, 3선개헌반대, 유신반대 등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반체제세력은 통일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학생 및 재야의 다양한 통일론은 크게 보면 先민주 後통일론과 先통일 後민주화론으로 구분된다. 先민주 後통일론은 통일방법과 통일절차 및 통일후 체제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 반면 先통일 後민주화론은 모든 형태의 통일은 다 좋다는 統一至上論에서부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 통일을 위해서 반미자주화와 파시스트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31)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p. 89-94, 171-196.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포함하였다.³²⁾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구조 및 그러한 구조적 틀 내에서 진행된 중상주의적 산업화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1950년대에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이념으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 실천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3공화국 이후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며 따라 급진적 내용의 민중민주주의론이 제기되었으며 통일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급진화·혁명화됨으로써 활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었으며 대중적 지지기반도 상실했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민주화와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계속 환기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문제를 체제내로 수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IV. 통일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통일은 한민족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민족 전체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 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한민족은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사회의 화해·협력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자유, 평등,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목표로서의 통일」은 한국민족주의의 틀 내에서 모색될 수 밖에 없다.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간의 拮抗關係 및 補完關係를 통해서 형성·변해왔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사회의 주역인

32) 이정복,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1호 (1987 봄), pp. 127-141; 김도태, 「제야통일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참조.

시민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 대외적 자율성 확보, 통일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민족주의를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종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남북간 이념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적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성, 민족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역사의 공유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 서구의 근대민족국가에서의 「민족」개념보다 언어·혈연·문화를 바탕으로 한 게마인샤프트적인 「겨레」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³³⁾

그러나 1945년 이후 남북한간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³⁴⁾ 문화가 이념 및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부구조로서 총체적 의사소통체계이며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남북간 문화는 상당부분 통합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계급적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한국의 민족개념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남북간 전통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을 넓혀나가는 문화공동체형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서 文化變容現象(acculturation)이 일어나거나 남북간 문화통합정책에 의해서 南北間 文化的 相容性이 증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신일철, “저항적 민족주의: 그 대내면,”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69-71; 인용하는 서구에서 민족형성은 근대적 현상인 반면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터키, 이집트 등은 근대 이전에 「전근대 민족」을 형성한 뒤 「근대민족」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한국사회학연구」, 7, pp. 5-51.

34) 최상용은 1945년 이후 남북간에는 정치권력의 실체로서의 국가(Staatsnation)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문화국가(Kulturnation)와 민족의식을 토대로 한 국가(Bewußtseinsnation)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최상용,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 3권 1호 (91 봄), pp. 24-30.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갈등통합원리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원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의 틀내에서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용해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서 한국사회의 내부역량을 신장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통일후 남북간 지역갈등과 계층간·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 남북간 공통기반을 넓히기 위한 점진적 통합방안이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통일한국의 이념은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때 민주주의 이념과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통일한국의 정치적 미래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시민사회³⁵⁾의 자율성회복과 국가·시민사회간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³⁶⁾ 또한 전체로서의 민족이익과 개체로서의 개인 및 집단이익이 상호조정될 수 있는 협상의 틀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회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異見들이 의회정치의 틀

35)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밖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서 조직되는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의 사회활동영역”을 의미한다. David Hel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6.

36)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서울: 한울, 1992), pp. 75-82.

내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분업과 시장경제의 현실 속에서 자본축적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개입과 시장자율성의 적절한 배합 및 국가와 노동, 자본간의 협상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

그동안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에 대해서 농민, 대중, 중산층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³⁷⁾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회의 시대별 상황과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재 계층구조와 정치·사회세력의 정치성향 및 세력분포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시민계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은 「公人과 문화인」으로서의 성격과 「장사꾼」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⁸⁾ 시민은 반드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국가개입과 계급지배의 중화를 모색하며 시민문화의 헤게모니를 받아들이고 있는 개인과 집단, 계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⁹⁾

37) 이용희는 “농촌의 대중과 도시지식인의 전진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이용희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p. 93; 최상용과 손세일은 대중을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층으로 설정하였다. 최상용,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민족주의,” pp. 353-354,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114-135; 고영복은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半도시화된 층이고, 계층적으로 중간층이며, 제도적으로 지식인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영복,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담당세력,”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서울: 법문사, 1983), pp. 320-323.

38) 이와 관련하여 양승태는 “시민적(civil)이라는 용어는 문화, 도덕적 가치나 보편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거나 실천을 지향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부르주아는 물질적 가치 혹은 재산이라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되 한정적인 가치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승태, “무존재적 역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언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343-348.

39) 서구에서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경제적 계급에서 공적 시민으로 전환한 시민이었다.

한국에서 산업화의 결과 계층분화현상이 일어났지만 각 계층은 삶의 양식과 정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계급지향적 성향(clas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기 보다는 지위지향적 성향(statu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고 있다.⁴⁰⁾ 특히 한국에서는 제3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구조, 남북대결로 인한 계급문제의 표출억제, 한국인의 지위 상승욕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계급계층적 현상보다는 지위계층적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⁴¹⁾ 한국에서는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집단의식이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투표결과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성향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계급적 차원에서 모색되기 보다는 「계급연합적이고 초계급적인 시민연합」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구중관계급 등을 망라한 시민계층들이 계급혁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부르주아계급은 봉건영주와 토지귀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패권적 계급(conquering class)으로 등장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축적을 하는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40)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급(class)이 가장 중요하고 계급에 의해서 지위(status)와 권위(authority, 정치권력을 의미함)가 결정되며, 계급요인에 의해서 사회가 양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버(M. Weber)는 지위는 종교, 교육, 교양 등에 의해서 형성된 삶의 방식(life style)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명예 또는 위신(social honor and prestige)을 의미하며 계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위도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계급과, 지위, 정치적 권위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ric A. Nordlinger, "Political Sociology: Marx and Weber," in Eric A. Nordlinger, ed., *Politics and Society*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pp. 18-20.
- 41) 박광주, "한국적 지도자본주의론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 28 (1987 가을), pp. 57-83.
- 42) 한완상,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 9-25.

시민들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현실적 토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들이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될 때 대내적 갈등통합과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5)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안에서 한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세계체제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후 한국민족주의가 배타적 성향이나 팽창적 성격을 띠지 않고 국제화해·협력을 지향하면서 민족적 자존과 자율성을 보유했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